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세 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16
----------	----------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자 : 최세진, 강선영, 김순옥,
한상옥,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박학용, 김지수,
박주선

1. 제안이유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충전시설 설치 촉진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4조제2항제3호)
- 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근거법에 따라 규정함(안 제6조)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나. 협조부서 : 녹색환경과

다. 입법예고 : 2023. 10. 16. ~ 2023. 10.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동력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충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 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중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u>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충전시설”이란 <u>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① (생략)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u>수소연료공급시설을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동력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u> 4. (생략) ③ (생략)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u>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u> -----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u>충전시설에 대한 지원</u>) <u>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충전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6조(<u>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u>) ① <u>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u>
<u><신 설></u>	<u>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동의 받아야 한</u>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다.</p> <p>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 ----- -----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p> <p>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21. 7. 27.]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

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